

##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전환 위해선 비용 증가 인정해야”

마땅한 수단 없어 비용 증가 불가피...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정부가 올해 6월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가운데, 마땅한 감축 수단이 없는 데다 비용 증가도 불가피해 정부가 투명하게 이를 사회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기후변화센터, IKEP 공동 주관으로 열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2015년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년까지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수정하기 힘들다”며 “특히 국외감축률 11.3%는 결국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나 배출자인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장은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37% 감축목표는 더 이상 수정하기 어렵고, 이를 지키기 위한 이행 절차만 남아 있다”며 “기후변화협약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라는 것이어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조정이 필요하며,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섭 가천대 교수도 “산업계의 비용저감을 위한 낮은 에너지요금 정책이 과연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동기를 부여할 것인지

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동자부 시절 가전제품에 대한 효율등급제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상공부 관련 부서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해 기술혁신을 이룬 것처럼 오히려 기업들에 낼 돈은 내도 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국의 감축 11.3%에 소요되는 추가 부담은 모든 주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배출자 부담원칙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해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비용 증가와는 별개로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 논설위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신재생과 원자력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신재생 확대는 더디고, 탈원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석탄과 가스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병욱 환경부 차관은 추사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면서도 투명한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11.3%라는 국외감축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에너지문제, 대기문제와 함께 연관해서 종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



봄비가 촉촉히 내린 지난 14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제15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서울 하늘을 자욱하게 뒤덮었던 미세먼지를 씻어낸 봄비 덕분에 상암벌을 가득 메운 1만여명의 전기인들은 모처럼 만에 상쾌한 봄 공기를 마시며 함께 달렸다.

## 봄비 이겨낸 1만 전기인 '열정' 상암벌 달구다

15회 전기사랑마라톤 성황리에 열려

봄을 시샘하는 비도, 쌀쌀한 날씨도 1만 전기인들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 올해도 4월의 상암벌은 빨강, 노랑, 파랑, 하양 등 다양한 색의 우비를 입은 전기인들로 물결쳤다. ▶관련기사 3~6면 14일 본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제15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가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전기사랑 마라톤대회는 4월 10일 전기의 날을 기념하

고, 전기의 소중함과 전기안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올해 대회는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전기계 주요 협·단체, 한전·발전사 등 전력그룹사, 기업 등에서 1만여명에 달하는 전기인과 마라토너들이 참가, 전기계 최대 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알렸다. 특히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장, 성윤모 특허청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김학도 산업기술진흥원장, 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이형주 본지 사장을 비롯한 전기계 내의 귀빈들이 대거 참석해 축제를 함께 즐겼다.

▶2면에 계속

김병일 기자 kube@

### (뉴스초점) 한전 변압기 발주량 둘러싼 논란 '왜'

## 제조업체 “계약 물량의 30분의 1 규모, 불균형 극심” 한전 “사전발주제 확대...작년 11월부터 물량 증가”

한전의 변압기 발주량을 놓고 말이 많다. 제조기업들은 물량 편차가 워낙 커 이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지만, 한전은 그럴 만한 상황적 요인이 있다고 항변한다. 한전 구매 기자재의 균등발주 또는 계획발주 문제는 잇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이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한전의 고효율주상변압기는 1월에 1만 2030대, 2월에 9861대, 3월에 4334대가 발주됐다. 지난 3일에 나온 4월 1차 물량(2차는 18일)은 2166대다. 4월을 제외한다 해도 1월과 3월의 물량 편차는 약 3배 정도 되는 셈이다.

▲변압기업계 “인력·자금운용 위해 균등발주 꼭 필요”

제조업체는 발주물량의 월별 증가 또는 하락폭이 커서 기업 경영에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한다. 편차가 클수록 자금운용이나 조업시간 유지 등 경영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변압기조합의 경우 지난해 총 연간단기계약 물량은 1만 7124대,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427대가 평균치다. 월 2회 발주되는 것을 감안하면, 회차당 713.5대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4월 1차 발주물량은 실제로는 24대에 그쳤고, 이는 평균치의 약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월별 발주물량이 균등하지 않다 보니 예측 생산이 불가능하고 일정한 매출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30명이 일하다 물량이 30분의 1로 줄었다고 29명을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

니냐”면서 “일감을 많이 달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계약된 물량을 되도록 균등하게 발주해주면 자금과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는 연간단기계약 물량에 맞춰 월별로 최대한 평균치에 해당하는 균등발주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 “사전발주제 확대, 잔재원입 증가 등 여파”

한전은 기업들의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일단 사실 관계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 1분기 발주량은 총 2만 6225대로 전년(3만 2020대) 대비 5795대, 약 18% 감소한 것은 맞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동안 전체 물량은 오히려 56%(1만 8376대)나 늘어난 5만 821대라는 것이다(11월 2만 1151대, 12월 1만 7640대). 이는 단순히 지난해 말 확대된 사전발주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사전발주제도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의 여파로 하반기에 발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산관리·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생산라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량 일부를 사전에 발주하는 것이다. 당해연도 4/4분기에 다음연도 1/4분기 물량의 20~30%를 미리 발주하는 방식이다. 변압기도 기업들의 요구로 지난해 사전발주제 대상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분석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발주량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올 들어 한전은 장기미준공 배전공사에 대한 일제정비가 이뤄지면서 잔재 환입물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재고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다. 실제로 1분기 한전의 자재 청구금액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한전 관계자는 “특정시기만 떼어서 보면 물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실제 총 발주량은 되레 증가했다. 다만 사전발주제 시행과 잔재 환입물량 증가에 따라 편차가 일부 나타났다”면서 “4월 말이나 5월 초쯤이면 연평균 수준의 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송세준 기자 21ssj@



존재의 가치를 채우기 위해 나눔을 선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M&A사문기관  
**양도양수·신규면허  
비용지원**  
건설114 T.02-522-1114  
www.c114.com

한전 배전기자재 균등발주...